

종합감사

2019.12. 2. ~ 12.13.

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결과

2020. 3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 . 감사실시 개요	1
II .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	2
1. 일반현황	2
2. 주요 업무 추진실적	3
3. 수입 · 지출 내역	4
III . 감사실시 결과	5
1. 분야별 감사결과	5
2.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	20

I. 감사실시 개요

☐ 감사배경

- 한국공인회계사회(이하 '한공회')는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기(3~4년 주기) **종합감사 시기 도래**(직전 감사 '16.7월 실시)
-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위탁사무 처리실태 등을 점검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한공회의 역량 제고를 도모

☐ 법적근거

- 공인회계사법 제47조제1항(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.)

☐ 감사기간 : 2019.12. 2.(월) ~ 12.13.(금), 10일(근무일 기준)

☐ 감사대상 : 2016.7월~2019.11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한공회의 위탁사무 전반

☐ 감사요원 : 감사담당관 외 8명

-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(5명) 및 기업회계팀(1명), 금융감독원(2명)

☐ 감사중점

- 외부감사법에 따른 심사·감리 업무 수행의 적정성
-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록, 징계 등 업무 수행의 적정성
- 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
- 품질관리감리 등 감리업무의 독립성, 공정성 준수 여부 등

II.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

1. 일반현황

□ 연 혁

- 1945.10.01. 조선계리사회(임의단체) 설립
- 1954.12.11. 한국계리사회(법정단체) 발족
- 1966.11.19.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재발족
- 2019.11.01. 공인회계사 등록회원 21,469명 가입

□ 소재지 :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12

□ 조직 및 인원 : 5개 부문, 16팀 9본부 1실, 119명

* 회장(비상근): 최중경(56년생) / 서울대(경영학), 행시 22회, 경제수석비서관(前), 기재부 차관(前), 지식경제부 장관(前)

감사(비상근): 나철 호(72년생) / 한양대(경영학), 제정회계법인 대표
김성남(58년생) / 성균관대(세무학), 한영회계법인

<조 직 도>



2. 주요업무 추진실적

☐ 주요 현황(2019. 3. 31.현재)

○ 등록회원 현황

회계법인	감사반	개업일반	휴업회원	계
11,440명	1,437명	583명	7,424명	20,884명

○ 감사인 현황

회계법인		감사반	
감사인 수	구성원 수	감사인 수	구성원 수
183개	11,440명	273개	1,437명

○ 수습공인회계사 현황

회계법인	감사반	기타기관	수습중지	계
923명	1명	73명	69명	1,066명

☐ 주요사업 추진실적

- ①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외부감사법) 하위규정 개정 지원
- ②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지원
- ③ 표준감사시간 제정
-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제정
- 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(시행 2019.4.1.)
- ⑥ 품질관리기준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
- ⑦ 핵심감사제 등 시행
- ⑧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·체크리스트 마련
- ⑨ 회계법인 분할·분할합병 제도 도입
- ⑩ 비외감법 대상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확산 지원
- ⑪ 「회계의 날」 지정·선포,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
- ⑫ 비외감법 부문의 감사공영제 도입
- ⑬ 감리결과 지적 유형과 감사 유의사항 등 안내
- ⑭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에 대한 점검 강화

3. 수입·지출 내역

□ 2019년도 수입·지출 예산

수입	지출
<p>○ 수입 계 : 283억원</p> <p>▶ 회원수입 : 199억원</p> <p>▶ 회원외수입 : 84억원</p>	<p>○ 지출 계 : 283억원</p> <p>▶ 사업비 : 123억원</p> <p>▶ 일반관리비 : 160억원</p>

□ 2018년도 결산

○ 재무상태(B/S)

<p>◆ 자산 : 120억원</p> <p>· 당좌자산 : 109억원</p> <p>· 투자자산 : 7억원</p> <p>· 유형자산 : 4억원</p>

<p>◆ 부채 : 35억원</p> <p>· 유동부채 : 26억원</p> <p>· 비유동부채 : 9억원</p>
--

<p>◆ 자본 : 85억원</p> <p>· 기금 : 24억원</p> <p>· 전산장비교체준비금 : 9억원</p> <p>· 임의적립금 : 57억원</p> <p>· 전기이월수지차액 : 5억원</p> <p>· 당기수지차액 : -10억원</p>
--

○ 수입·지출현황

<p>◆ 수입총액 : 236억원</p> <p>· 회원수입 : 187억원</p> <p>· 회원외수입 : 49억원</p>

<p>◆ 지출 : 246억원</p> <p>· 사업비 : 102억원</p> <p>· 일반관리비 : 144억원</p>

III. 감사실시 결과

1 분야별 감사결과

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탁업무 관련

① 감리결과 사후관리 미흡

- 한공회는 일정 기한 내에* 조치 대상자로 부터 ‘감리결과 조치 사항 이행보고서’를 제출 받아 이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(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, 한공회 감리조사 업무규정 제23조)

* ·임원 해임 권고: 임원의 해임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1개월
·임원 면직 권고, 임원 6개월 내 직무정지,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, 시정요구 등: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통지로부터 1개월
·감사업무 제한: 감사업무 제한 기간 종료 후 1개월

- 그런데도, 최근 3년간(2016.4월~2019.현재) 감리결과 조치이행 보고기한을 도과한 이행보고서 미접수 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

- 감사인 8건(전체 72건, 11.1%), 공인회계사 23건(전체 233건, 9.9%), 대표이사 및 임원 해임권고·개선권고·시정요구 6건(전체 11건, 54.5%)에 달함

- 또한, 감사반은 ‘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함에도,

- 최종 이행보고서에 ‘계획 중’이나 ‘최종 확정 예정’으로 보고된 사항도 최종적인 이행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종결 처리함

⇒ 한공회 회장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(통보)

② 위탁감리위원 성과평가 지표 개선 필요

- 한공회의 위탁감리 업무는 '19년 12월 현재 계약직 감리위원(감리역 포함) 총 23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체 「감리업무 성과평가지침*」에 따라 본부장과 감리조사위원장이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있음

* 동 지침은 「심리·감리업무 성과평가 지침」으로 개정('19.8.1.)

- 근무성적 평가지표는 ‘프로젝트수행실적평가’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정성적 평가가 대부분 (1차: 본부장 40%, 2차: 감리조사위원장 60% 평가)

<참고> 근무성적평가 평정항목별 배점

항목	프로젝트 수행실적평가	프로젝트 성과평가	업무수행 태도평가	교육평가	근태평가	계
배점	35점	45점	10점	5점	5점	100점

- ‘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지표(35점)’는 감리보고서 등의 ‘감리 내용의 충실성’ 등 정성적 요소로만 평가를 하였고
- 프로젝트 성과 평가지표(45점)도 감리결과 지적사항을 정성평가하고 있어 감리 충실도 개선과 지적 건수를 늘릴 유인이 부족
 - 그 결과, '17년도에 6건을 지적한 K위원보다 3건을 지적한 C위원의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나는 등 중요한 업무실적인 지적사항(위탁감리 조치, 중선위 상정) 건수가 근무성적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음
- 한공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'19.8월「심사·감리업무 성과평가지침」개정을 통해 지표를 개선하였지만, 여전히 정량적 평가가 미흡
 - 프로젝트 성과평가 지표(45점)에 ‘심사대상 지적 비율 향상 기여도(10점)’와 ‘기타 정량평가 지표(10점)’를 추가 반영토록 평가지침을 개정
-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증진의 설립목적은 지닌 법인이지만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 등의 위탁감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‘이중적 지위’의 한공회의 조직 특성을 감안할 때,

-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위탁감리 업무 강화를 위해서는 감리지적 건수 등을 반영한 정량적(객관적) 지표 마련·확대가 중요

⇒ 한공회 회장은 감리위원의 엄정한 위탁감리 수행결과인 조치(지적) 건수 등 정량적 지표가 근무성적평가에 충분히 연동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필요 (개선요구)

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고유업무 관련

③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

- 한공회는 징계혐의 사실 조사와 징계 등 조치 의결을 위해 「윤리조사심의위원회(이하 ‘조사심의위’)」를 설치·운영 중(한공회 회칙 제65조)
 - 조사심의위 위원은 조사 관련 업무수행 후 「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비 지급기준(이하 ‘조사비 지급기준’)」에 따라 반기별로 조사비를 지급받음
 -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된 조사비 예산범위 내에서 40%는 위원별 정액 산정하여 지급하고, 나머지 60%는 위원별 실적건수에 따라 차등 지급
- 그런데, '19.1월과 '19.7월 한공회의 조사비 지급내역을 보면
 -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 2명은 「조사비 지급기준」과 달리 각각 '19.1월 1인당 360만원, '19.7월 1인당 310만원을 수령한 바 있고,
 - A 위원도 조사안건이 없어 정액 산정(40%)된 조사비를 '19.1월 68만원, '19.7월 86만원을 수령함(건수별 조사비(60%)는 미지급)
 - 또한, 건당(1건) 조사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산 전체잔액을 반기별 전체 조사건수로 나눈 값을 건당 조사비로 산정하여 반기별로 기준 금액이 변동됨

⇒ 한공회 회장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비의 60%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안전에 대한 안전검토사례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“윤리조사심의위원회 안전검토사례비” 기준을 만들고, 조사비의 40%는 순수 조사비에 해당하므로 조사 건당 지급기준금액을 정하여 조사비를 지급하며, 위원장·부위원장·간사는 조사 건수에 관계 없이 정액지급 시 지급기준금액 및 근거를 마련할 필요 (개선요구)

④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 미흡

□ 「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 규정」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조사심의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제한 규정이 없음

○ 조사심의위 위원 현황('19.12.10. 기준)을 보면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9년 이상 위원으로 장기간 활동* 중

○ 또한, 조사심의위는 심의·의결 권한을 가진 2개의 소위원회*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제2소위원회는 전원 개업회원으로 구성되어, 외부로부터 심의과정, 위원구성 등의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

* 제1소위는 법령·윤리기준 위반, 공인회계사 외부행동강령 위반 등을, 제2소위는 감사 및 인증업무, 세무조정업무 등 직무관련 사항을 각각 담당

□ 조사심의위는 회원의 법령·윤리기준 위반, 부실감사 등 직무위배 사항 조사 및 심의 의결 등 객관적 시각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운영해야 되므로 동일 위원의 장기위촉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

⇒ 한공회 회장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내 동일 위원이 장기간 위촉 되지 않도록 내규 또는 운영방식을 개선하고, 직무의 독립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2소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 (통보)

⑤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절차 미흡

□ 한공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조사심의위 의결내용이 「공인회계사법 (§48①1, §48①2호)」에 해당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,

* («공인회계사법」 §48①) 1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, 2.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

○ 윤리위원회는 징계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장을 거쳐 조사심의위에서 재심하도록 요구 가능(한공회 회칙 제56조제10항, 제11항)

□ 금융위원회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제1항에 따른 징계가 1년이하의 직무정지 또는 견책에 해당되면 윤리위원회에 위탁(법 § 51①, 영 § 38①,②)

○ 한공회 윤리위원회는 「공인회계사법」 제48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의결하는 의결기구임

□ 따라서, 조사심의위 의결내용 중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1항제3호, 제4호의 사항*도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,

* (「공인회계사법」 §48①) 3.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, 4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○ 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재심 요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됨

⇒ 한공회 회장은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내용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 (개선요구)

⑥ 「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」 적용범위 확대 필요

□ 「공인회계사법」(이하 ‘회계사법’)은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의 감사·증명업무(이하 ‘감사 등’)를 할 수 없고, 회계법인 사원(파트너)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그 회계법인의 감사 등 직무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○ (1호)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○ (5호) 공인회계사가 감사 등 직무를 수행하기로 한 대가로 해당 회사의 주식·신주인수권부사채·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받았거나 제공받기로 한 경우

「공인회계사법」

제21조(직무제한)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.

3.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제33조(직무제한)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.

2.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

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

제14조(직무제한)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.

1.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

5. 해당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·신주인수권부사채·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

□ 한공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**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**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(이하 ‘관리지침’)」을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
○ 동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 임직원은 **상장법인 주식거래 및 보유현황을 회계법인에 신고**하고, 회계법인은 신고내역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

□ 그러나 회계사법 상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감사 등 직무수행이 제한되고 「공인회계사 윤리기준」은 공인회계사 (인증업무팀)의 직계가족과 의뢰인의 이해관계까지 **고려***하고 있는 데 비해,

○ 관리지침은 공인회계사 본인의 주식보유 현황만을 신고하도록 할 뿐 배우자의 보유주식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

* 「공인회계사 윤리기준」290.106 “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나 그 직계가족이 인증의뢰인과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...(중략)...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기적 위협은 독립성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.”라고 명시

□ 한편,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(§11)」 및 동법 시행령(§17)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

○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회계사법 상 직무제한 준수를 위한 주식보유현황의 상시적 관리 필요성은 더욱 증대

- 따라서 주식보유현황 관리강화를 위해 관리지침 개정 등을 통해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도 신고하도록 하여,
 -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,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한 신고의무 회피 및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

⇒ 한공회 회장은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식도 신고하도록 「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」을 개정하는 등 주식보유 현황 관리를 강화할 필요 (개선요구)

⑦ 한공회 내부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

- 한공회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», 「공인회계사법」 및 자체 회칙 등에 근거하여 총 20여개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·운영 중
 - '16년이후 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,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 등 활동실적이 저조

<참고> 16년 이후 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운영 현황

(단위 : 건수)

위원회명	설치근거	구성 인원	연도별 회의개최 횟수			
			16년	17년	18년	19년
회계신인도개선위원회	회 칙 제84조	13명	0	0	0	0
분쟁조정위원회	공인회계사법 제45조	6명	0	0	0	0
심의위원회	회 칙 제83조	10명	0	0	0	0
공공부문연구위원회 (비영리소위)	회 칙 제85조	7명	2회	0	0	0

⇒ 한공회 회장은 활동실적이 미미한 일부 위원회들의 경우 운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, 계속 운영할 경우 활동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 (통보)

⑧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른 한공회 내규 현행화 필요

□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개정에 따른 「감리조사업무규정」 개정 필요

- 舊 심사감리제도가 사후 적발·제재에 편중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,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‘외감규정’) 개정^{*}(’18.11월)으로 재무제표 심사^{**} 제도를 도입(’19.4.1. 시행)한 바 있음

* 외감규정 제23조(감리등의 착수), 제24조(감리등의 방법), 제28조(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) 등

** 재무제표의 회계위반여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소명을 들은 후 회계위반 판단 시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(외감규정 §23①)

- 감리집행기관인 한공회 역시 ’19년 4월 이후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총 428사를 선정하여 ’19년 11월말 기준으로 48건을 완료하였고, 380건은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에 있음

- 하지만, 한공회 내규(감리조사업무규정)에 외감규정 개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,

- 재무제표 심사 업무(선정, 선정보고, 실시 등)는 개정 외감규정^{*} 등에 따라 수행하는 반면, 안내문(예: 심사 착수·종결안내문) 등에는 여전히 「감리조사업무규정^{**}」을 근거 규정이라고 기재하여 안내

* 「외감규정」 제23조(감리등의 착수), 제40조(위탁감리업무의 보고), 제28조(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) 등

** 「감리조사업무규정」 제8조(감리의 대상), 제24조(위탁감리업무의 보고 등), 제9조(감리의 방법)

- 또한 외감규정 개정으로 심사·감리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중 일부의 보고기한 단축과 의무사항이 신설되었지만, 「감리조사업무규정」에 관련 개정사항을 미반영하였음

<참고> 증선위 보고의무 주요변경사항

구분	舊 외감규정	개정 외감규정	비고
협의감리 착수	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(§76①단서)	지체없이 (§40②)	단축
심사 수행과정 회계기준해석 쟁점	-	지체없이 (§23④)	신설
심사결과 감리실시	-	지체없이 (§23⑤)	신설
재무제표 심사결과	-	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(§40③)	신설

- 따라서, 외감규정 개정에 따라 신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관련 규정과 심사·감리 전반적인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여 「감리 조사업무규정」을 개정할 필요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「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», 「감리업무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», 「실무수습에 관한 규정」의 현행화 필요
 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‘외감법령 등’)을 '18.11.1 전부개정하여 ‘법률명’과 ‘조제목’, ‘내용’ 등이 변경 되었지만,
 - 한공회는 감사종료 시점까지 외감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「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」 등에 반영하지 않아, 다음 <참고>와 같이 근거 조문이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할 필요

<참고> 외감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현행화 필요 한공회 규정

한공회 규정명	현행	개정(안)
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(이하 생략)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 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(이하 생략)
	제9조(감리결과의 처리) ① 위탁감리위원회는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·회계감사기준 및 외감법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「 <u>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</u> 」 제53조 및 제54조,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(이하 생략)	제9조(감리결과의 처리) ① 위탁감리위원회는 감리결과 회계처리 기준·회계감사기준 및 외감법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「 <u>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</u> 」 제26조제3항·제4항·제7항·제8항 및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(이하 생략)
감리업무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 <u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15조 제5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(이하 생략)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 <u>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8조 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12조(이하 생략)

실 무 수 습 에 관한 규정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중략) 「 <u>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(중략) 주식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9항·제10항(이하 생략)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(중략) 「 <u>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(중략)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2항(이하 생략)
	< 이하 규정 동일하게 개정 필요 > 제4조제2항, 제5조제3항, 제11조 제1항제2호 “외부감사법 제3조제7항”	제4조제2항, 제5조제3항, 제11조 제1항제2호 “외부감사법 제9조제4항”

※ 기타 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」, 「회칙」 등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

⇒ 한공회 회장은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감리업무조사규정’, ‘위탁감리위원회 운영규정’, ‘감리업무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’, ‘실무수습에 관한 규정’을 개정하고, ‘분쟁조정에 관한 규정’, ‘한공회 회칙’을 정비할 필요 (개선요구)

⑨ 한공회 민원처리지침 일부 개선 필요

- 한공회는 상담과 신고(제보·고충)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2019.4월 「민원처리지침」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지만, 다음의 문제점이 있음
 - 한공회는 별도의 민원총괄부서 없이 민원의 내용으로 구분한 범주별 처리담당부서(직원)를 지정하여 접수(처리)하였음
 -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치의결을 요구한 신고사항만 처리결과를 보관하고 있으며, 기타 민원상담 사항은 보존하지 않고 있음
 - 또한, 「민원처리지침」상 민원접수 거부 시 민원인에게 거부사유를 통지할 의무가 없고,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아 민원 접수·관리가 부실하게 처리될 우려
 - 이와 함께 민원총괄부서 부재에 따라 각 직원마다 접수거부 근거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반환하거나 민원을 주관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상존

⇒ 한공회 회장은 민원총괄부서를 마련하여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, 민원처리대장에 접수·보정·사실조사 및 처리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며, 민원 접수 거부 시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 및 보존하도록 한공회 「민원처리지침」을 정비할 필요 (개선요구)

⑩ 한공회 공시실 운영 재검토

□ 「외부감사법(§ 25④)」에 따르면 한공회는 “회계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” 하고,

○ 「동법 시행령(§ 28②)」에 따라 한공회는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3년 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

○ 「한공회 회칙(§ 55①,②)」에 따르면 한공회는 공시실*을 설치하고 공시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

* (공시실) 회계법인으로 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 등을 비치·공시하기 위해 설치

□ 그러나, 한공회는 관련 법령과 회칙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인 공시실을 설치·운영하지 않았으며

○ 내규인 「공시실 운영규정」을 최초 제정(1994.3.25.)한 이후 단 한차례만 개정(2005.6.22.)을 하였을 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으로 전환된 후 이를 규정에 반영하지 않았음

⇒ 한공회 회장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현실을 반영하여 「공시실 운영규정」을 재검토하고 다각적인 공시 방법을 마련할 필요 (통보)

다 직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련

⑪ 일반회비 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미이행

- 2016년 7월 종합감사시, 일반회비는 부조회비*와 달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

* 납부기간이 경과한 미수금에 대하여 100% 대손충당금 설정

- 향후 회수가능성 평가 등을 통해 일반회비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
- 이와 관련, 한공회는 『감사결과 조치계획 보고』를 통해, “2017년 예산편성부터 일반회비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미수회비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예정” 이라고 보고하였고,
 - 다음해 11.27. 『감사결과 조치완료 보고』에는 “시행중” 이라고 보고한 바 있음

- 그러나 이러한 한공회 보고와는 다르게 2016년 이후 여전히 일반회비 미수금*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음

* 납기경과 일반회비 미수금: ('17) 516백만원→('18.) 550백만원→('19) 546백만원

- 이에 대해, 한공회는 '18.2.22.~23. 감사관련 회의에서 장기미납회비 (5년 이상 체납)의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, 다음을 근거로 “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미설정 한 것” 이라고 소명
- (개인회원) ①회원의 지위를 모두 유지하는 점, ②대부분 개업회원으로 5년마다 공인회계사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하려면 미납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점, ③상시 소재 파악과 연락이 가능한 점, ④경조금 지급 시 미납회비를 상계 처리하는 점 등임
 - (회계법인) ①대다수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, ②회계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예치된 ‘손해배상공동기금’ 으로 미납회비를 상계 처리하는 점 등임

- 또한, 조치완료 보고에 ‘시행중’ 라고 보고한 이유는 “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의 핵심인 회수가능성 평가를 했으며, 2018.4월에 평가할 예정이었기 때문” 라고 소명
- 그러나, 감사관련 회의에 대한 문서(내부결재)와 회의록 등 증빙자료가 없고, 동 회의가 미수회비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식 기구라고 보기 어려움
 - 또한, 조치완료 보고 시('18.4월) ‘시행 중’ 이라고 보고하여 미수회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라는 조치요구 사항을 “既 완료했거나 현재 이행 중에 있다” 는 뜻으로 해석하게 하였음

⇒ 한공회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권한 있는 기구에서 미수회비 회수가능성을 평가하고, 향후 감사결과 이행보고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(경고)

⑫ 월별 결산 및 보고업무 미이행

- 한공회는 「회계 규정(§ 14③)」에 따라 1개월간의 거래를 집계하는 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잔액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
 - 이는 동 자료가 정기적으로 작성·보관되고 적시에 관리자에게 보고되도록 하는 등 회계처리가 정확하게 계상되고 재무상태가 적정하게 표시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- 한편, 2016년 종합감사에서 2015회계연도('15.4.1.~'16.3.31.) 정기결산 이후 3개월간('16.4~6월) 결산을 수행한 적이 없고 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잔액현황표도 작성·보관하고 있지 않아
 - “향후 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잔액현황표를 정기적으로 작성·보관하고 동 자료를 적시에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결산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” 을 지적한 바 있음

- 이에 대한 **운용실태 점검 결과**, 2018회계연도('18.4.1.~'19.3.31.) 정기결산 이후 8개월간('19.4~11월) **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잔액현황표를 정기적으로 작성·보관**하였으나
 - 월별 결산 후 관리자에게 동 자료를 적시에 보고·결재하지 않았고, 관리자가 분기별로 결재하는 등 월별 결산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였음

⇒ 한공회 회장은 합계잔액시산표와 예산잔액현황표가 관리자에게 적시에 보고·결재될 수 있도록 월별 결산업무 관련 내부통제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(경고)

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

□ 분야별 지적내역

지적분야	지적내용	처분내용
외부감사법 위탁업무 관련 (2)	■ 감리결과 사후관리 미흡	통보
	■ 위탁감리위원 성과평가 지표 개선 필요	개선요구
한국공인 회계사회 고유업무 관련 (8)	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조사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	개선요구
	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 미흡	통보
	■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 결과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 절차 미흡	개선요구
	■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거래현황 관리지침 적용범위 확대 필요	개선요구
	■ 한공회 내부 각종 위원회 정비 필요	통보
	■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른 한공회 내규 현행화 필요	개선요구
	■ 한공회 민원처리지침 일부 개선 필요	개선요구
	■ 한공회 공시실 운영 재검토	통보
직전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련 (2)	■ 일반회비 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 회계처리 미이행	경고
	■ 월별 결산 및 보고업무 미이행	경고

□ 조치계획

- 「금융위원회 감사규정」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
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